

외교 정책의 기초로서 지리적 문해력 재조명: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지 오류 문제를 중심으로

김이재* · 김창환**

Revisiting Geographic Literacy as the Foundation of Foreign Policy: Cognitive Misperceptions of the Indo-Pacific Region

Eje Kim* · Changhwan Kim**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핵심 지정학적 공간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외교정책의 기초 역량으로서 지리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범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보다는 공간 통제, 전략적 연결망 재편, 해상로 및 병목 지점 확보를 중시하는 지정학적 사고의 부활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정책 수립뿐 아니라 대중적 이해의 차원에서도 지리적 개념과 공간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둘러싼 인지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지리적 문해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신남방정책 대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범주, IPEF 참여 지역,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상당한 혼선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 오류는 지리교육 축소, 서구중심적 교육과정, 지도 기반 학습 부족 등 공교육의 구조적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외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교관 및 공무원 대상 지리적 문해력 재교육과 함께, 국가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확한 공간 인식을 강화하는 지리교육 확대를 제안한다.

주요어 : 지리적 문해력, 인도-태평양, 지정학, 신남방정책, 외교정책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cognitive misperceptions of the Indo-Pacific region amid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and reconsiders geographic literacy as a foundational capacity for foreign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reflects a revival of geopolitical thinking, prioritizing spatial control, strategic connectivity, and maritime routes over liberal norms and multilateral frameworks. This shift underscores the growing importance of spatial awareness in both policy-making and public understanding. To assess cognitive gaps related to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 survey of 350 university students was conducted. The findings reveal significant confusion regarding policy target countries, ASEAN membership, IPEF participation, and the meaning of the Indo-Pacific concept. Notably, students from teachers' colleges showed consistently lower accuracy than geography majors. These mispercep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marginalization of geography education, Western-centric curricula, and limited map-based learning. This study argues that strengthening geographic literacy is essential for improving foreign policy effectiveness and calls for systematic training for diplomats and public officials, along with enhanced geography education in both formal and lifelong learning contexts.

Key Words : Geographic literacy, Indo-Pacific, Geopolitics, New Southern Policy, Foreign policy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eje33@gmail.com)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llskim@kangwon.ac.kr)

I. 인도-태평양 개념의 부상과 전략적 중요성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개념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연속된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이 용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2007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두 해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를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박재경, 2025). 아베 총리는 이 역사적 개념을 현대 국제정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연결된 전략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유지라기보다 미·중 패권 경쟁을 전면화한 지정학적 재배치 전략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체제 경쟁이 아니라 공간·연결·통제의 문제로 인식하며, 인도-태평양을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 무대로 설정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지정학적 포위선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는 인도를 전략적 균형추로 편입시키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하나의 연속된 해양 전략 공간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이와 같은 공간 개념의 재편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륙-해양 복합 전략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해석된다(박재경, 2025).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전략에서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동맹과 선택적 연합에 기반하고 있다. 한·미, 미·일, 미·호 동맹을 축으로 하되 동맹을 규범 공동체가 아니라 비용·효과 중심의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기술·공급망 경쟁에서 미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 질서보다 공급망의 지정화화를 우선시하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은 관세 전쟁과 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직접 차단하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을 개방된 시장이 아니라 전략적 경제 전장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전략이 추진된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이 있다. 중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현상 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되었으며,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 첨단기술 분야는 미·중 경쟁의 핵심 접점으로 부

상하였다(서정진, 2022).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되 규범적 설득보다는 압박과 거래를 통해 관리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인태 지역은 단순한 지역 구분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 집중되는 핵심 지정학적 공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가치 확산보다는 공간 통제, 해상로 확보, 전략적 연결망 재편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외교의 중심 무대이기도 하다.

미국은 동아시아-서태평양에 국한된 기존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인도양까지 확장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륙-해양 연계 전략을 동시에 견제하고자 하는데, 이는 인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하나의 연속된 전략 지대로 묶는 개념적 전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방어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을 공간적으로 차단하고 연결망을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대응이다. 이러한 접근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규범 중심 전략과 대비되며, 인도-태평양이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 무대로 구조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급격히 확장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뿐 아니라 인도, 동남아(ASEAN),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였고, 동남아는 인태 전략의 핵심 무대로 설정되었다(Aristyo, 2022).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를 제안하고, 2022년 5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미국이 구상하는 경제·안보·공급망 협력의 핵심 틀로 삼았다. 2022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발리 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IPEF 참여 국가를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강조하기도 하였다(Aristyo, 2022). IPEF가 화려한 외교적 수사와 달리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된 이후 IPEF 구상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교 정책에서 동남아(ASEAN)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트럼프 외교에서 국가는 규범 공동체가 아니라 위치·접근성·연결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공간 행위자로 인식되며, 해협, 항로, 섬, 군사 거점은 외교 담론의 주변부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재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치는 다시 지도 위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메타지리 체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명(toponymy)의 정치적 의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질서를 규정하는 담론 장치로 기능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정학적 사고의 부활을 예고한다. 실제로 '인도-태평양'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상대화하면서 전략적 상상력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태 전략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변화 속에서 외교정책의 기초 역량으로서 지리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지리적 문해력은 지리적 지식과 공간적 추론을 활용하여 사회적·환경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정의되며(National Geographic Society, 2006), 지리교육학에서는 공간적 사고, 장소 이해, 지리 정보 해석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Bednarz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는 이를 공간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를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고(이경한, 2013), 한국,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으로서 지도력(地圖力)이라는 신조어도 지리적 문해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이재, 2021a).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인의 전반적인 지리 지식 및 공간 인지 오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 IPEF, 인태 지역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사회과교육과 소속 대학생 350명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59명, 경기·인천 73명, 강원 108명, 제주 32명, 전남 67명이 참여하였다. 신남방정책과 IPEF 관련 지리적 지식과 문해력, 외교 정책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폼과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문항별 정당률과 오답 양상을 분석하고 지리 전공 학생 집단과 비전공 학생 집단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인지 오류의 양상과 유형별 원인을 추정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외교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지리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우선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적 범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 조사를 통해 신남방정책과 IPEF, 인도-태평양 개념

에 대한 인지 오류의 유형과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나아가 인지 오류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한국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외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리적 문해력 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II.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각국의 입장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인태 지역에서 외교 전략을 제시해 온 주체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IPEF 발표 이전부터 각자의 인식과 원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개해 왔다(송화섭, 2022; 이재현, 2022; 조원득, 2022; 최윤정, 2022). IPEF 회원국으로서 한국 역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해 왔지만 이를 둘러싼 국내 논의 과정에서는 인지적 혼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IPEF 가입을 기존 신남방정책의 폐기로 오인하거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대중 봉쇄 정책으로 단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IPEF 참여국(그림 1)과 문제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그림 2)을 표시한 지도를 비교해 보면, 두 범주에 해당하는 지역이 상당 부분 중첩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태 지역에 대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각국의 지리적 범위 차이는 자국의 이익, 각 국가가 보유한 해외령의 존재 여부, 에너지 수입 경로, 그리고 중국 포위망의 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채택한 국가들은 인태 지역을 전 지구적 해양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좁은 범위'를 채택한 국가들은 이를 특정 지역의 경제 안보 또는 인접국과의 관계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연합(EU)과 다수의 유럽 국가는 인도양과 태평양 도서국 간의 연결성에 주목하는 표준적 범위를 채택하고 있다(Willigen and Blarel, 2024). EU의 공식 입장과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기점으로 설정하고 태평양 도서국에서 범위를 마감하는데, 이는 인도양 전체를 포함하되 미주 대륙까지는 확장하지 않는 형태이다. 반면 영국은 여기에 걸프(중동) 지역을 포함하여 '동아프리카 및 중동'을 서쪽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 공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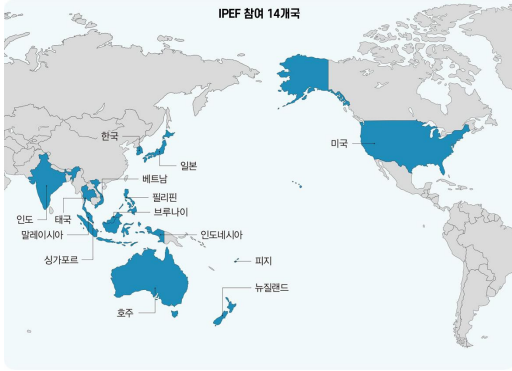


그림 1. IPEF 참여국 지도(산업통상자원부, 2022)



그림 2. 한국의 외교정책 대상지역 지도(외교부, 2019)

로바키아 등은 서쪽 기점을 더욱 동쪽으로 이동시켜 파키스탄에서 태평양 도서국까지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국의 무역 이익이 집중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해상 회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적 지리 확장’의 특징을 보인다. EU가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동해안에서 태평양 섬 국가들까지’라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개 회원국의 실제 인식과 참여 의지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되어 있다.

한편 인도양을 중심으로 인태를 정의한 다수의 유럽 국

가들과 달리,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인태 지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싱가포르, 필리핀, 뉴질랜드, 헝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말라카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서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접점에 주목하며, 필리핀과 뉴질랜드는 인도양보다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자국 인접 해역 중심으로 지역을 정의한다(최윤정, 2022). 헝가리의 경우 서쪽 기점을 인도로 설정하고 동쪽 종점을 한국·중국·일본으로 한정함으로써, 인태 지역을 사실상 ‘인도-동북아시아 경제권’으로 축소하여 인식하는 특징

표 1. 국가 및 지역별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정의 범위

그룹	국가 및 지역	지리적 정의 (범위)
태평양 중심 국가	미국	인도양-미주 대륙 서부 해안
	한국	아프리카 동부 해안/중동(호르무즈)-북태평양
	일본	아프리카 동부 해안-미주 대륙 서부 해안 및 남미
	중국	인도-일본
	호주	인도양 동부-미주 대륙 서부 해안
	싱가포르	아프리카 동부 해안/ 중동-동남아시아(말라카 해협)
	필리핀, 뉴질랜드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서양 중심 국가	인도	아프리카 동부 해안-미주 대륙 서부 해안
	스리랑카	아프리카 동부 해안/중동-동남아시아(말라카 해협)
유럽	EU 공식,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프리카 동부 해안-태평양 도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스웨덴	아프리카 동부 해안-미주 대륙 서부 해안
	독일	인도양 전체-태평양 전체
	네덜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파키스탄-태평양 도서국

출처 : 각국의 외교 및 전략 문서 내용과 지도를 바탕으로 정리.

을 보인다.

한편 인태 지역을 아프리카에서 미주 대륙 서부 해안까지로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정의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연속체로 인태 지역을 인식하는 국가는 과거 해양 패권국이었거나 대외 확장 의지가 강한 프랑스, 일본,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서쪽으로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미주 대륙의 서부 해안, 즉 미국 서부와 남미 일부까지를 하나의 전략 단위로 통합한다. 특히 프랑스는 레위니옹(인도양)에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태평양), 그리고 클리퍼턴섬(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외령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연결하기 위해 이러한 초광역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초기에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해양 아크'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현재는 캄차카 반도에서 남미의 페루·에콰도르 연안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사실상 대서양 직전까지를 인태 지역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례들에 비해 다소 좁은 범위를 설정하는 가운데 미국 본토 중심적 관점에서 인태 지역을 정의한다. 미국의 인태 범위는 자국 태평양 연안에서 시작하여 인도양, 특히 인도 서해안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과거 태평양 중심의 안보 범위를 인도라는 전략 거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기존 지명을 외교 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이상국, 2022).

이처럼 각국이 정의한 인태 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포함 여부 등 지리적 범위 설정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나라가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ASEAN)가 인태 전략의 핵심 지역이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점: 지리적 인식 오류 문제

지정학적 격변은 외교 정책에 있어 지리교육과 지리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외교가 보여주듯, 현대의 외교·안보·경제 전략은 국가의 위치, 거리, 연결망, 병목 지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이는 시민과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지

도를 읽고 공간적 맥락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지리적 문해력이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선언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핵심 지역인 동남아는 한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남아는 중국,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외교·경제 분야를 넘어 한국 사회·문화 전반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한국과의 인적 교류도 활발한 동남아는 가치와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경제의 주인공인 청년층이 두텁고 성장 속도 또한 빠른 동남아는 향후 인태 지역에서 호주나 뉴질랜드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2).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IPEF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정책 환경이 상이한 만큼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Natalegawa and Poling, 2022). 이는 미국 역시 동남아를 APEC에 준하는 수준으로 중시하고 IPEF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남방정책은 선진국 중심의 한국 외교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가 컸지만, 인도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급한 정책 집행으로 인해 여러 오해와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 실제로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과 대통령 내외의 동남아 순방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반복되었는데(연합뉴스, 2019), 이는 지리적 문해력 저하 현상과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신남방정책 홍보 과정에서 나타났다. 정책 수립을 주도한 청와대 고위 인사의 '불행하면 동남아(ASEAN) 가라'는 발언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세계일보, 2019). 결국 해당 인사의 사퇴로 이어진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7만~9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이 동남아에

속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한 혼선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지리적 문해력이 부족한 가운데 언론이 왜곡된 세계 지도를 사용하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지속할 경우 외교 정책에서 공간 인지 오류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 학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부정확한 지리 지식이 축적되면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인태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의 ‘인도’를 국가명인 인도(India)로 오인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나아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동남아가 인태 전략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역설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과 인태 전략 대상 지역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¹⁾

한국 언론과 학계, 교육계에서 인태 지역의 범위와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면적과 형태의 왜곡이 심한 세계 지도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고위도 중심 세계 지도에서는 적도 인근의 동남아 및 신남방 지역이 축소되어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김이재, 2021b), 이는 공간 인식의 왜곡을 초래한다. 동남아 각국의 영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김이재·박민재, 2023). 실제로 공영방송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제작한 IPEF 관련 지도에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약 2,600만 명), 뉴질랜드(약 500만 명)는 개별 국가로 명시된 반면, 인구 약 6억8천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일부)’로 축

약되어 표시되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동남아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 인식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공간 인지 오류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태 지역이나 동남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외교 정책을 실행·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지리적 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외교적 결례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외교부가 공식 트위터에 체코의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게시하여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며 소멸한 국명임에도 담당자가 이를 혼동한 것이다(동아일보, 2018). 또한 2021년 말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프란치스코 전 교황의 방북과 관련하여 ‘교황이 따뜻한 남반구 출신이므로 겨울에는 이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였다(조선일보, 2021). 프란치스코 전 교황의 모국이 아르헨티나로서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는 맞지만, 아르헨티나는 스키장이 존재할 정도로 겨울 기온이 낮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더 나아가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가 모두 따뜻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발언은 지리적 문해력 부족에서 비롯된 부정확한 설명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빈민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드문 사례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경에 갇힌 평면적 사고와 서구 중심주의로 왜곡된 세계 인식, 단순화된 세계 지도에 의존해서는 고차원적으로 전개되는 국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김이재, 2021a; 야노 토루, 1999).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는 외교부 장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연합뉴



그림 3.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한 IPEF 지도

스, 2022), 외교 정책과 해외 순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기도 했다. 한국 외교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채 ‘외교 참사’ 논란을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배경에는 부실한 지리적 기초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동남아 등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편견이 문제가 되거나(연합뉴스, 2026) 해외에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2021년 7월 공영방송 MBC가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20여 개 국가를 부적절하게 소개하여 국제적 비판을 받은 사건은 지리적·문화적 문해력 결여가 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떠한 파장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이티를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으로 표현하고, 우크라이나 소개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활용한 방식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맥락적 이해 부족과 결합되어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였다(뉴시스, 2021). 당시 CNN과 BBC 등 해외 언론이 한국 방송사 및 언론의 문제로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한국 사회와 정부는 그저 한 방송사의 실수로 넘어가고 국가교육과정 개정이나 세계지리 교육 강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IV. 한국 대학생들의 인도-태평양 공간 인지 오류 양상: 지리적 문해력 평가 문항 개발과 실행

격동적인 패권 경쟁 환경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교 분야 인력의 전문성, 특히 지

리적 문해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일반 국민 역시 외교 정책을 이해하고 합리적 공간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교정책 대상 지역과 개념에 대한 인지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에 대한 이해 수준과 공간 인지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1. 지리적 문해력 평가 문항 개발과 실행

본 조사에서는 신남방정책과 IPEF 관련 지리적 지식과 문해력, 외교 정책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폼과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시사 관심도, 정보 획득 경로, 정책 대상국 이해, 지역 범주 이해, 공간 인식, 전략 개념 이해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주로 대학교 학부생이며, 표집 수는 총 350명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서울대·경희대 학생 59명, 경기·인천 지역은 경인교대 학생 73명, 이외 지역으로는 강원대 108명, 제주대 32명, 전남대 67명이 참여하였다. 학과는 외교 및 국제 이슈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리학, 지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사회과교육과 학생들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문항별 정답률과 오답 양상을 분석하고, 지리 전공 학생 집단과 교육대학교 학생 집단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인지 오류의 유형과 그 가능 원인을 추정하였다.²⁾ 분석은 문항별 정답률과 오답 선택의 분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리 전공 집단(지리학·지리교육 등)과 교대생 집단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 2 신남방정책 및 IPEF 관련 지리적 문해력 평가 문항 사례

범주	내용 구분	실제 문항
지식 이해	신남방정책 대상국 범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대상이 아닌 나라는? ①인도 ②호주 ③ 미얀마 ④부르네이 ⑤말레이시아
위치 지식	동남아(ASEAN) 범주 이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①타이 ②라오스 ③싱가포르 ④스리랑카 ⑤인도네시아
위치 지식	IPEF 지역 범주 이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①남아시아 ②동아시아 ③중앙아시아 ④동남아시아 ⑤오세아니아
지리적 문해력 종합적 사고력	인태 전략 개념과 취지 이해	미국이 주도하는 IPEF와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기본 취지와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술형

2. 조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인도-태평양 인지 오류 양상

문항 1은 설문 응답자들의 시사 및 외교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 획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응답자 347명 중 ‘매우 높은 편이다’ 30명(9%), ‘높은 편이다’ 81명(23%), ‘중간이다’ 124명(36%), ‘낮은 편이다’ 91명(26%), ‘매우 낮은 편이다’ 21명(6%)로 나타났다. 중간 이상의 관심도를 보이는 비율은 235명(6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대학생들이 외교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항 2는 응답자들이 시사 및 외교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획득하는지를 중복 선택 방식으로 조사한 문항이었다. 총 247개의 응답 중 TV 뉴스 103명(42%), 유튜브 66명(27%), 인터넷 기사 34명(14%), 종이신문 32명(13%), 도서 2명(1%), 기타 10명(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로 TV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 도서나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 중심의 정보 습득 방식과 달리, 영상 매체 중심의 정보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획득 매체의 특성은 인지 오류 발생의 환경적 조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TV 뉴스는 비교적 높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를 접하면서 이를 선별하고 평가하는 디지털 문해력이 요구되지만, 시사 및 외교 이슈의 경우 개인 수준의 판단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판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오류가 포함된 뉴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기본적인 지리적 문해력을 기반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항 3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대상이 아닌 국가를 식별함으로써 정책 대상 범주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문항에서는 인도, 호주, 미

얀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선지로 제시하였으며 정답은 ‘호주’였지만, 정답인 호주를 선택한 응답자는 340명 중 177명(52%)에 그쳤다. 오답 선택 비율은 브루나이 107명(31%), 인도 24명(7%), 미얀마 20명(6%), 말레이시아 12명(4%)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 전공 학생과 교대생 집단을 비교한 결과, 지리 전공 학생(총 184명)은 호주 102명(55%), 브루나이 57명(31%), 인도 10명(5%), 미얀마 10명(5%), 말레이시아 5명(3%)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생(총 83명)은 호주 40명(48%), 브루나이 32명(39%), 인도 4명(5%), 미얀마 4명(5%), 말레이시아 3명(4%)으로 나타났다. 교대생 집단은 정답률이 약 7% 낮았으며, 특히 브루나이를 오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약 8% 더 높았는데, 이는 브루나이에 대한 인지 오류가 교대생 집단의 정답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문항 4는 동남아(ASEAN)에 속하지 않는 국가를 식별하는 문항으로, 타이, 라오스,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선지로 제시하였으며 정답은 스리랑카이다. 분석 결과, 정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343명 중 218명(64%)이었고, 오답은 싱가포르 63명(18%), 라오스 33명(10%), 인도네시아 15명(4%), 타이 14명(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에서 지리 전공 학생(총 187명)은 스리랑카 127명(68%), 싱가포르 31명(17%), 라오스 15명(8%), 인도네시아 8명(4%), 타이 6명(3%)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생(총 83명)은 스리랑카 46명(55%), 싱가포르 20명(24%), 라오스 12명(14%), 타이 4명(5%), 인도네시아 1명(1%)로 나타났다. 교대생들의 정답률은 지리 전공 학생에 비해 약 13% 낮았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라오스를 오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 5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식별하는 문항으로,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선지로 제시하였으며 정답은 중앙아시아이다. 분석 결과, 정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342명 중 212명(62%)이었다. 오답은 오세아니아 75명(22%), 남아시아 32명(9%), 동남아시아 12명(4%), 동아시아 11명(3%)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비교 결과, 본 문항은 지리 전공 학생과 교대생 간 정답률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이었다. 지리 전공 학생(총 186명)은 정답률 68%를 보인 반면, 교대생(총 83명)은 46%에 그쳤다.

문항 6은 IPEF와 한국판 인태 전략의 기본 취지와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Indo’가 국가명 인도가 아닌 인도양을 의미한다는 점과 인도

표 3.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문항에 대한 정답률

문항 질문	정답률 (%)		
	전체	지리전공학생	교대생
문제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대상이 아닌 나라는?	52	55	48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64	68	55
미국 정부가 공식 출범을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62	68	46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와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7	59	49

양·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협력 구상을 이해한 응답은 341명 중 195명(57%)에 불과했다. 오답 분석 결과, ‘Indo’를 ‘India’로 오인한 응답이 54명(16%), 동남아가 핵심 지역임을 이해하지 못한 응답이 31명(9%),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대상국 중첩을 인식하지 못한 응답이 34명(10%), 인태 개념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시했다고 오인한 응답이 27명(8%)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에서 지리 전공 학생의 정답률은 59%, 교대생은 49%로 약 10%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동남아의 핵심성을 인식하지 못한 비율은 교대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Indo’ 개념 오인, 대상국 중첩 인식 부족, 개념 기원 오인 등은 두 집단 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종합하면, IPEF 비포함 지역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62%(지리 전공 68%, 교대생 46%), 인태 전략 개념 이해 문항의 정답률은 57%(지리 전공 59%, 교대생 49%)로 나타났다.

조사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외교 및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지리적 이해 수준에서는 상당한 오류가 확인되었다. 정보 획득 경로는 TV 뉴스와 유튜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보의 정확성과 왜곡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을 반영한다. 특히 뉴미디어 기반의 정보 소비는 인지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 대상국에 대한 이해에서는 정답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브루나이를 오답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남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SEAN 구성국에 대한 이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교대생 집단에서 오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IPEF 관련 문항에서도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을 선택하는 오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Indo’를 국가명 인도로 오인하거나, 인태 전략의 핵심 지역이 동남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 문해력이 전공 여부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인태 지역 및 동남아에 대한 지식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V. 인태 전략 관련 공간 인지 오류 문제의 원인 분석

‘전쟁은 최고의 지리 교사’라는 서양 속담이 시사하듯,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리학 및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리 문맹이 급증하는 현실은 지정학적 위기가 일상화된 세계에서 각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과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미국의 사회과 교육에서 지리교육의 축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경제적·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를 미국 엘리트들의 낮은 지리적 문해력에서 찾는 견해도 존재한다(Murphy, 2018). 하름 데 블레이 교수가 저술한 『왜 지금 지리학인가』에서는 지리 문맹 지도자들이 미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지리’ 교과가 부재하고 지리 내용이 축소되면서 지리적 문해력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리 영역이 사회과교육의 작은 부분으로 축소되고, 지리 교육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지리교육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한국사가 강조되고 세계사·세계지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비서구 지역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며, 이는 해방 직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김이재, 2021b). 최근 다문화 교육이 특정 국가와 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서구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남아와 제3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낙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아시아경제, 2025).

또한 교과서에서 동남아를 포함한 비서구 지역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공간 인식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김이재, 2021b),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편향된 메타지리 체계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김이재·박민재, 2023). 한국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서구 중심으로 구성된 배경에는 학계와 교육계 전반에 걸친 미국 중심 지식 체계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김이재, 2021c; Lewis and Wigen, 1997).

반면 일본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도 기반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인태 전략을 시각화하여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도에 표현함으로써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하나의 연속된 해양 공간으로 표현한 지도를 사용

해, 일본이 추진하는 인태 전략의 지리적 범위와 핵심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지도 표현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입지적 특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인태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서 동남아 지역을 주목하게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정책 지도는 공간적 범위와 전략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동남아(ASEAN)의 면적과 중요성이 축소되어 표현되는 문제는 인태 전략과 외교 정책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김이재·박민재, 2023). 실제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인태 전략 지도를 비교해 보면, 양국의 지도력(地圖力)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³⁾ 한국 외교부가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지도(그림 5)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 면적이 지나치게 확대된 서구중심 메타지리에 기반해 한반도-아세안-인도를 잇는 삼각 축을 대륙 중심으로 평면 배치하는 방식이기에 인도양-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동남아에 주목하기 어렵다. 즉, 지도의 힘과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국 외교부의 인태 지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된 해양 안보 중심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륙에 갇힌 아시아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공간 인지 오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반면 일본 외무성이 제작·배포한 인태 전략 지도(그림 4)는 인도양 연안의 아프리카와 태평양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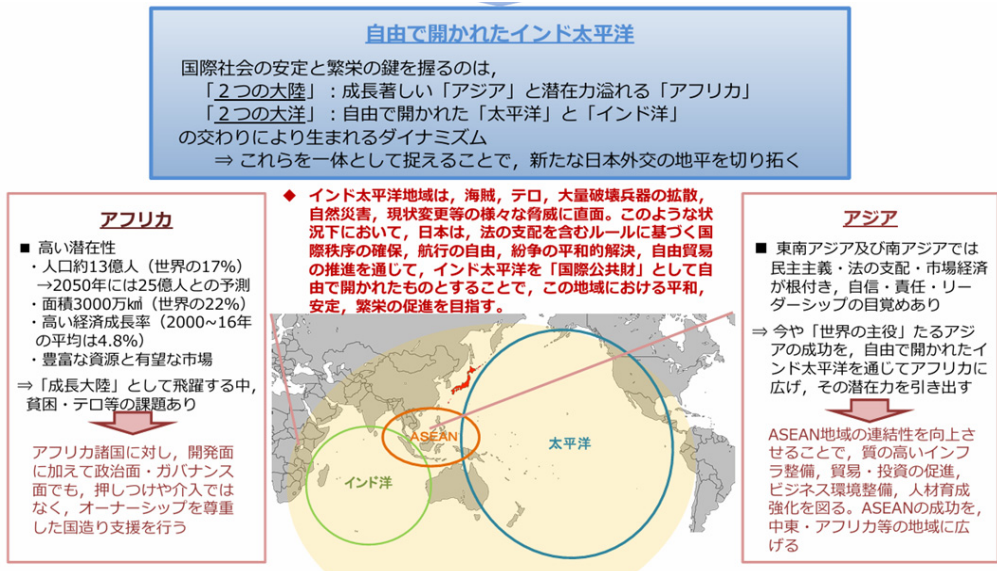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외무성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 지도

출처: 外務省, 2026,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안의 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남아의 위치와 범위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고 인태 전략 대상 지역의 최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인태 전략에서 동남아(ASEAN)가 핵심 지역이며, IPEF에도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동남아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미국 역시 동남아시아를 인태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⁴⁾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에서 ‘Indo’를 국가명 ‘India’로 혼동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칼리만탄(보르네오)섬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지 못하거나 싱가포르·브루나이와 같은 고소득 국가가 동남아에 속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지리적 문해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의 교육과정에서 지리학 및 세계지리 강좌가 부재하고(Murphy, 2018), 2000년대 이후 국가 교육과정에서 국사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리교육 시수가 축소된 구조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는 외교부 장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연합뉴스, 2022), 외교 정책과 해외 순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기도 한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를 활용한 공간 기반 소통 전략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지리적 문해력 교육 강화 필요성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지리적 문해력이 외교 정책의 기초 역량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신남방정책 대상국, ASEAN 범주, IPEF 참여 지역,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인지 오류가 존재함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오류는 지리 전공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리적 문해력이 단순한 배경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 오류가 개인의 정보 부족 차원을 넘어 공교육에서의 지리교육 축소, 서구 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 지도 기반 학습의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동남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 부족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외교적 오해와 정책 혼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외교에서 인태 지역의 부상은 국제정치의 지리적 재편과 지리적 사고의 복권을 상징한다. 그동안 한국 외교와 교육계는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 의존해 왔으며, 실제로 동남아 및 인태 지역 전문가의 부족 속에서 논의가 충분히 심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가 능동적인 외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사고에 기반한 지리교육의 체계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태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리적 사실에 기반한 전략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리적 문해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차원에서 지리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도 기반 공간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확한 공간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문해력은 더 이상 선택적 교양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실효성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다(de Blij, 2012; Murphy, 2018). 즉, 지리는 더 이상 단순한 배경 지식에 머물지 않고 지정학·외교·안보를 이해하는



그림 5. 외교부 블로그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도
출처 : 외교부 블로그 모파랑.

인지적 기초가 되며, 지명과 지도, 공간 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지도력(地圖力)은 21세기 국제질서 이해의 핵심 도구임을 시사한다. 외교 정책에서 지리적 무지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적 개편과 대국민 지리적 문해력 교육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외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 문해력 재교육도 중요하다. 나아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연구자, 대학교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 일반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지리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확산할 필요가 있다.

註

- 1) 예를 들어 ‘새 정부 들어 인태 전략이 강조되며 신남방 정책이 폐기되고 동남아가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은 인태 전략의 핵심 지역이 동남아임을 고려할 때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 이해 부족이 정책 해석의 오류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2) 연구 대상 선정 배경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데이터포털 자료(‘교육부 전국 대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 엑셀 파일)을 바탕으로 지리학과, 지리교육학과 등 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의 통계를 산출하였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학부 전공 과정에서 지리학과 또는 지리교육과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교는 총 22개로 파악된다. 그중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학과, 제주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강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과 학생들의 수준을 하나의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학생들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들 학생은 지리 전공자는 아니지만 졸업 후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 교사이다. 따라서 이들의 지리적 지식 수준과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한국 교육뿐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대생들의 지리적 인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인교육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 3)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인도양과 태평양,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한 인태 지도를 제작하여 자국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 외교부의 지도는 유럽·러시아 등 고위도 지역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동남아를 포함한 인태 지역은 축소된 베이스맵에 기반하여,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 중심 세계 지도 위에 인태 지역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 4)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아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2022년 11월 프놈펜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인태 전략의 핵심 지역인 동남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김이재, 2021a,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地圖力), 쌤앤파커스.

김이재, 2021b,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원인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33-52.

김이재, 2021c, “한국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재현된 동남아: 교수요목기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서술내용 분석” 교육논총, 41(2), 271-287.

김이재·박민재, 2023, “한국 공영방송의 서구중심주의 재조명-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메타지리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4), 91-105.

박재경, 2025, 인도-태평양 패권경쟁, 인문공간.

서정건, 2022, “미국의 인태전략: 미중갈등과 미국정치” 황재호 편, 갈등과 공존의 인도·태평양: 각국의 인태 전략, 명인문화사, 3-36.

송화섭, 2022, “일본의 인태전략: 힘보다 규칙을 지향하는 비전” 황재호 편, 갈등과 공존의 인도·태평양: 각국의 인태전략, 명인문화사, 37-65.

이경한, 2013, “지리적 문해력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의 방

- 향” 대한지리학회지, 48(6), 879-897.
- 이상국, 2022, “중국의 인태전략: 환경인식과 주요 정책” 황재호 편, 갈등과 공존의 인도·태평양: 각국의 인태 전략, 명인문화사, 125-158.
- 이재현, 2022, “호주의 인태전략: 미래를 위한 지정학, 지경학적 비전” 황재호 편, 갈등과 공존의 인도·태평양: 각국의 인태전략, 명인문화사, 66-92.
- 조원득, 2022, “인도의 인태전략: 전략적 자율성과 안보 딜레마” 황재호 편, 갈등과 공존의 인도·태평양: 각국의 인태전략, 명인문화사, 93-122.
- 최윤정, 2022, “아세안의 인태전략: 전략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포용적 해법” 황재호 편, 갈등과 공존의 인도·태평양: 각국의 인태전략, 명인문화사, 231-267.
- 야노 토루 역음(부산외대 아시아지역연구소 역), 1999,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 전예원.
- Aristyo Rizka Darmawan, 2022, Joe Biden's new Indo-Pacific Strategy: A view from Southeast Asia,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Bednarz, S. W., Heffron, S., and Huynh, N. T., 2006, A Road Map for 21st Century Geography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Research, National Geographic Society, Washington, DC.
- de Blij, H., 2012, Why Geography Matters: More Than Ever, Oxford University Press(유나영 역, 2015, 왜 지금 지리학인가, 사회평론).
-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2,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2 Survey Report, ISEAS-Yusof Ishak Institute, Singapore.
- Lewis, M. W. and Wigen, K., 1997, The Myth of Continents: A Critique of Metage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Murphy, A. B., 2018, Geography: Why It Matters, Polity Press(김이재 역, 2022, 지리학이 중요하다: 세계는 지리로 작동한다, 김영사).
- Natalegawa, A. and Poling, G. B., 2022,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Digital Trade in Southeast Asi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2006, *Geographic Literacy Study*, National Geographic Society, Washington, DC.
- Willigen, N. and Blarel, N., 2024, Why, how and to whom is the European Union signalling in the Indo-Pacific? Understanding the European Union'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in the epicentre of multipolar competition,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7, 69-90.
- 외무성, 2026년 1월 16일,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일본 외무성.
- 뉴시스, 2021년 7월 26일자, “CNN·NYT, MBC 올림픽 중계 논란에 ‘불 만하게 실패’”
- 동아일보, 2018년 11월 29일자, “[사설] 대통령 방문 전날 체코 26년 전 국명 SNS 올린 외교부.”
- 세계일보, 2019년 1월 31일자, “너나 가라! 신남방”...‘취업 절벽’ 좌절한 국민들 위로는 못 할망정.”
- 아시아경제, 2025년 2월 12일자, “[기자수첩] ‘다문화가정’이란 단어의 낙인효과.”
- 연합뉴스, 2019년 3월 20일자, “말레이 가서 인니어로 인사한 文...‘외교 결례’ 논란.”
- 연합뉴스, 2022년 9월 27일자, “박진, 해임건의안 제출에 ‘외교는 국익 마지노선...안타까워.’”
- 연합뉴스, 2026년 2월 27일자, “[샷] ‘한국은 성형수술 나라’...동남아 누리꾼 뿔났다.”
- 조선일보, 2021년 11월 3일자, “靑 대변인 “교황 따뜻한 나라 출신” 발언에, 美방송 “아르헨 스키장 있는 거 아냐””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월간 통상 (2022년 1월호) Vol. 121. 공공데이터포털, 교육부 전국 대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106344/fileData.do>
- 외교부 공식 블로그 모파랑, <https://m.blog.naver.com/mofakr/222987394879>
- 교신 : 김이재, 13910, 경기도 안양시 삼막로 155,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kimeje33@gmail.com)
- Correspondence: Eje Kim, 13910, 155 Samakro, Anyang-shi, Gyeonggi-do, South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kimeje33@gmail.com)

투고접수일: 2026년 2월 26일
심사완료일: 2026년 3월 23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27일